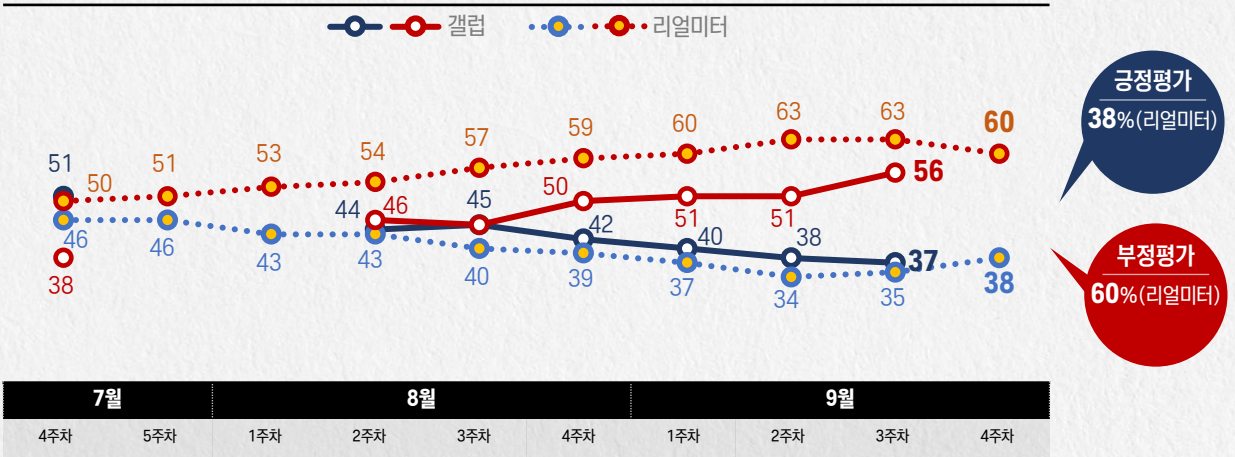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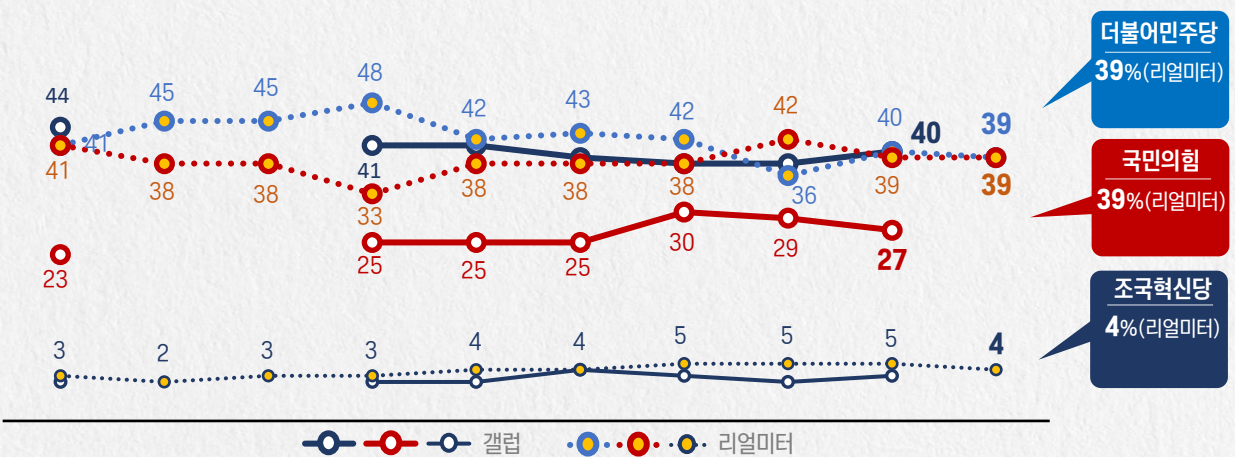


01 금주의 화두 :

■ 이 대통령 기자회견, 지지율 반전의 계기될까?

02 주간 여론 동향 (2026년 7월 4주차 ~ 2026년 9월 4주차, 전화면접조사)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정당
지지도정치권
주요뉴스

- (09.21) 군 간부 3명,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폭발로 부상 / 강훈식 비서실장, 인사 실패·지지율 하락 책임론에 사의 표명 /李大統領,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 /李大統領, 유엔총회-멕시코 국빈방문 위해 출국
- (09.22)李大統領, 이소영-이형일-강신철-홍지선 장관 임명안 재가 / 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靑,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 / 유시민 “李大統領이 말한 檢개혁 틀린 말...지금껏 국민 속인 것”
- (09.23) 대법원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李大統領-트럼프 정상회담...북미대화-핵잠-조선-전작권 논의 / 강신철, ‘지뢰 폭발’ 서부전선서 “적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하라”

02 정세 읽기

이 대통령 기자회견, 지지율 반전의 계기될까?

지난 두 달 여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부동산, 인사, 민생 문제에 여권 내부 계파 간 갈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 노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복합적이다. 60%대였던 지지율은 30% 중반대로 떨어졌다. 여권 안팎에서 위기론이 터져 나왔다. 하락세를 멈추고 지지율을 반등시킬 모멘텀이 필요했다. 청와대는 추석 직전인 9월 18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와 여권은 분위기 반전과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 기대는 실현될 수 있을까?

● 이 대통령의 자기 진단

“성과에 치중해 국민의 감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 이 한마디에 대통령의 상황 진단이 집약되어 있다. 국민을 향해 몸을 낮췄다. 언어도 절제했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외부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언제나 국민은 옳다”, “모든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한 나머지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우선, 거시경제와 민생경제 사이의 간극이 있음을 인정했다. 수출·성장·주식시장 등 일부 경제지표는 개선됐지만 국민의 실제 삶은 충분히 나아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회복과 성장만큼 생활비·주거비·자영업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음으로 정책 방향보다 배려·섬세함·소통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원인을 정책의 전면적 실패라기보다, 정책을 설계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안과 반대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 문제로 해석했다. 그리고 민주개혁 진영의 내부 분열도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친문·친노·김대중계·친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지향하는 사람은 모두 동지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들에게 혐오·배제·멸칭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내부 분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은 현재 위기를 국정노선 자체의 위기보다는 민생 체감, 과정 관리와 소통, 인사 신뢰, 집권연합 내부 통합의 위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이 제시한 해결책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전면적 노선 변경보다 기존 개혁과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통, 민생, 인사, 실행 방식을 교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째, 민생과 부동산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재배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규제, 세제를 함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공급 상황을 매주 직접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고, 전월세와 실수요자 문제를 포함한 세부 대책을 주문했다. 또 서울 집중 문제를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보고,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기능하도록 국가 공간구조를 바꾸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02 정세 읽기

둘째, 검찰개혁은 계속하되 피해자 권리와 제도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권한의 분산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고 강조했고, 동시에 개혁 과정에서 수사 공백, 피해자 권리 약화, 인권 침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어 지지층에는 개혁 후퇴가 아니라는 신호를, 중도층에는 제도적 부작용을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검찰개혁도 함께 언급했다.

셋째, 인사와 국정운영 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고, 인사권도 예외가 아니라며 인사 시스템을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모든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관과 참모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넷째, 외교·안보에서는 직접 개입과 국익 보호를 구분하겠다고 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경제·에너지·해상수송 등 국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여와 협력 가능성은 열었다. 이는 파병 반대 여론과 동맹·경제안보 요구를 동시에 관리하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연임은 없다고 못박았다. 연임과 관련한 정치적 논란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를 보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과 우선순위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뜻한다. 반성과 성찰의 언어는 분명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 결국 변화의 의지는 확인되었지만 기자회견의 진정성은 후속하는 구체적 변화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각계의 반응과 엇갈리는 초기 평가

여권의 반응은 대체로 대통령의 자기성찰과 통합 메시지를 긍정하면서, 이를 당·정 관계 재정립과 민생 중심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본인 연임 이슈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국힘 등 야권은 “반성 없는 자화자찬과 남 탓”으로 평가하면서, 소통 부족보다는 ‘국정 실패와 권력 독주’ 프레임으로 각을 세웠다.

언론 보도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대통령이 99분 동안 서서 질문을 받고, 평소보다 무거운 태도로 지지율 하락과 내부 분열에 관해 직접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과 연임 문제, 전쟁 개입, 검찰개혁 등 민감한 현안에도 비교적 분명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을 평가했다. 한편 사과와 성찰이 추상적이고 변화의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왔다. 국민 여론의 평가도 아직은 엇갈린다. KBS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9월 21~2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자회견을 잘했다는 평가와 잘못했다는 평가가 각각 44%로 같았다.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2%, 부정평가는 51%였다. 리얼미터가 9월 21일 하루 동안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자회견을 잘했다는 평가가 39.2%, 잘못했다는 평가가 57.7%였다. 9월 21~23일 주간 집계에서는 국정운영 긍정평가 37.9%, 부정평가 60.1%로 전주 대비 지지율이 3.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8~29일 실시된 KSOI 조사에서도 국정운영 긍정 38.5%, 부정 57.8%로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이 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본격적인 반등과 상승세를 예측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 지지율의 추락세는 일단 멈추고 바닥 다지기와 초기 반등 신호가 나타났지만, 구조적 상승 추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02 정세 읽기

● 이제는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할 때!

지난 대통령 기자회견은 지지율 반등의 가능성을 다시 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지지율 반등을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만한 구체적인 변화를 차례로 보여주어야 한다. 실질적인 체감 민생의 변화 요소, 달라진 인사의 과정과 내용, 내부 분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통합의 움직임, 섬세해진 부동산 정책과 소통 등이 핵심일 것이다. '국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줄만큼 변화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국정운영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공급 및 전월세 대책에서 구체적인 실행 일정이 제시될 것, 물가·주거비·자영업 경기에 체감 가능한 개선이 나타날 것, 인사검증 시스템 개편과 책임 있는 인사 조치가 드러날 것, 당내 갈등을 완화할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작동할 것,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의 세부 설계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 외교 성과가 에너지·수출·안보 안정으로 연결될 것 등이다. 또한 변화의 내용과 함께 그 과정과 태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달라진 태도와 구체적인 변화의 노력을 지속한다면 자연스럽게 지지율 반등은 추세화할 것이다.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 가장 정확한 조사
지자체,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선거컨설팅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9층(여의도동 13-25)